

2021 아동돌봄 원탁 토론회

아동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대전환을 위한 원탁토론

주최·주관 |  한국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후 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아동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대전환을 위한
원탁토론**

목차

인사말 / 축사

인 사 말	옥경원 대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축 사	국회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좌 장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	김아래미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민태호 사무처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토 론	송영진 마을돌봄TF팀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토 론	옥경원 대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토 론	이경아 연구위원 민주연구원
토 론	이상무 교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정은 위원장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토 론	조선경 과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등권리과

* 자유토론 : 이후 토론자 간 토론과 플루어 질문으로 진행

인사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본 토론회는 사회적 돌봄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고 또 대의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본회에서 전문가TF를 구성하여 2020년도 11월부터 총 12차례의 조사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비로소 궁극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 돌봄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국내 아동 돌봄에서는 체계 난립의 양상을 보입니다. 하여, 다양성은 인정하면서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각개 정책들을 전략적으로 구성할 필요를 제기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측면 즉,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으니 현재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문제 제기와 더불어 심도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선택권은 보장되어 있는지,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인지, 돌봄을 학교와 연계하는 것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의 두 섹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이슈들을 분석하기도 했으며 연령별 돌봄체계의 세분화 의견이나 연계조정 통합 방식과 같은 면밀하고 세부적인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 최종 화두를 던지는 것이 오늘 공개되는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는 그런 의미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4월 말 무렵,

토론회의 최종 매듭에서 우리는 높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현장이 겪는 갈등의 골이 매우 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실 마저 주최에 대한 부담과 후폭풍에 대한 난색을 보이면서 토론회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대의적인 것이었음에도 어떤 것이 아이들을 위한 행동인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상,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동 돌봄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머리를 맞대고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아동 돌봄은 유기되는 것일까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며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흔들리는 깃발을 세워봅니다.

어떠한 이유도 토론회를 방해할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과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분연히 목소리를 높이는 누군가가 없으면 항상 아이들의 미래는 타인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곳곳하게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아래미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정익중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함께 달려오신 아동 돌봄 TF 위원님들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간과 열정을 내어주신 여러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야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아동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대전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옥경원 대표님과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욕구는 많았지만, 돌봄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돌봄의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은 국정 과제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적 돌봄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 강화로 아동과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는 여러 정부 부처에 돌봄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돌봄이 보충적 성격의 서비스로 인식되다 보니 돌봄 서비스가 이용자인 아동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 높은 돌봄 환경이 구축되려

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제고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 구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책임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의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돌봄 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아동 돌봄과 관련한 인식이 변화되고 의미 있는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아동 돌봄을 위한 정책적 ·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귀중한 존재로 인식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례

좌장	정 익 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아동돌봄서비스의 대전환 김 아 래 미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_	아동중심 돌봄의 가치와 역할을 높이자 / 민태호	33
2 _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송영진	43
3 _	팔소 없는 찌빵 정책과 다섯 가지 대 전환에 대한 토론 / 옥경원	49
4 _	토론문 / 이경아	57
5 _	아동돌봄서비스의 전환점을 기대하며 / 이상무	65
6 _	아동중심의 돌봄 서비스 대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토론문 / 정운	71
7 _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평등권리과 / 조선경	81

토론 주제

—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아동돌봄서비스의 대전환

김아래미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주제

—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아동돌봄서비스의 대전환

김아래미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아동돌봄돌봄서비스의 대전환

최근 아동돌봄서비스¹⁾가 핵심 정책 어젠다로 떠올랐다. 그 결과,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1대 국회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발의하고, 아동돌봄서비스 체계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동돌봄서비스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돌봄 사회화의 필요성은 증대되는데 기존 아동돌봄서비스체계의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아동돌봄서비스체계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아동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체계 내 변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동돌봄서비스체계를 뒤집는 대전환을 통해 가능해진다. 오늘 발제는 이러한 대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아동돌봄서비스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부, 지자체,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1) 본 발제문에서 아동돌봄서비스는 미취학아동을 제외한 만 6~17세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의미한다.

I. 아동돌봄서비스 대전환, 왜 필요한가?

1. 아동돌봄 사회화의 필요성 증대

아동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역할이었으나, 맞벌이가구의 증가, 가족규모의 축소, 재난재해의 발생 등과 같은 요인들은 가족의 아동돌봄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맞벌이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2015년 47.3%에서 2019년 51.4%로 증가하였고, 만 7~12세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2015년 51.4%에서 2019년 54.8%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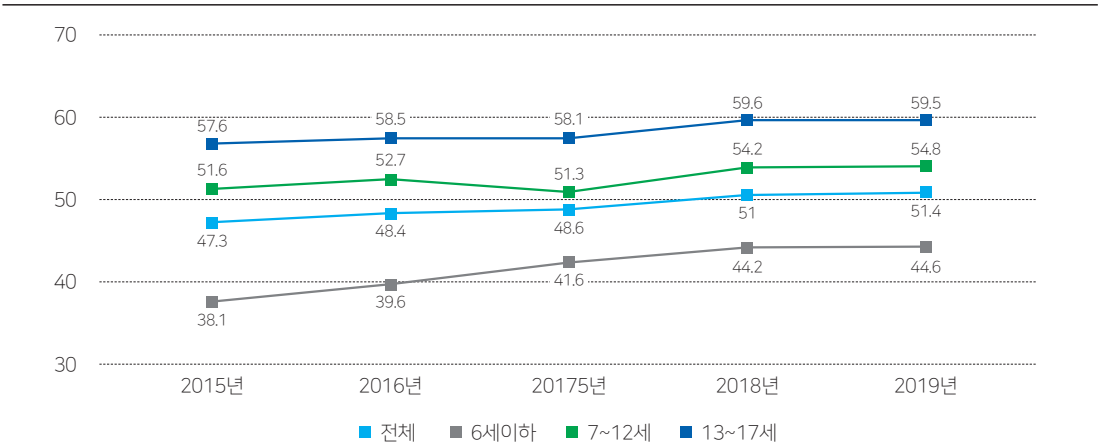
<표> 자녀 연령별 맞벌이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천가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중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중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중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중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중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중
전체	4,701	2,222	47.3	4,665	2,258	48.4	4,537	2,207	48.6	4,407	2,248	51.0	4,366	2,246	51.4	-335	24	4.1
6세 이하	2,084	794	38.1	2,090	827	39.6	2,062	857	41.6	1,994	882	44.2	1,932	861	44.6	-152	67	6.5
7~12세	1,315	678	51.6	1,308	690	52.7	1,285	659	51.3	1,318	715	54.2	1,381	758	54.8	66	80	3.2
13~17세	1,303	750	57.6	1,267	741	58.5	1,190	691	58.1	1,095	652	59.6	1,054	627	59.5	-249	-123	1.9

주1) 막내자녀 18세미만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그림> 자녀 연령별 맞벌이 비중의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 (2021) / 지역별 고용조사

또한 1970년 5.2명이었던 평균가구원수는 2019년 2.4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수가 감소하면서 이 기능을 대신해 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해진 것이다.

<표> 가구원수별 가구구성과 평균 가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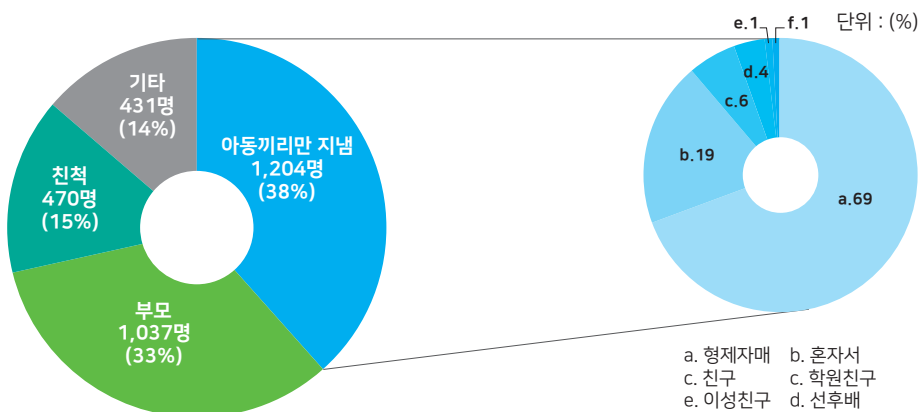
(단위 : 천가구, %, 명)

연도	가구수 (천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평균 가구원수(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	
1970	5,576	-	9.7	13.3	15.5	17.7	43.8	5.2
1975	6,648	4.2	8.3	12.3	16.1	18.3	40.7	5.0
1980	7,969	4.8	10.5	14.5	20.3	20.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0	13.8	19.1	29.5	18.8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1
2005	15,887	20.0	22.2	20.9	27.0	7.7	2.3	2.9
2010	17,339	23.9	24.3	21.3	22.5	6.2	1.8	2.7
2015	19,111	27.2	26.1	21.5	18.8	4.9	1.5	2.5
2016	19,368	27.9	26.2	21.4	18.3	4.8	1.4	2.5
2017	19,674	28.6	26.7	21.2	17.7	4.5	1.3	2.5
2018	19,979	29.3	27.3	21.0	17.0	4.3	1.2	2.4
2019	20,343	30.2	27.8	20.7	16.2	3.9	1.0	2.4

출처: e나라지표 (2021). 가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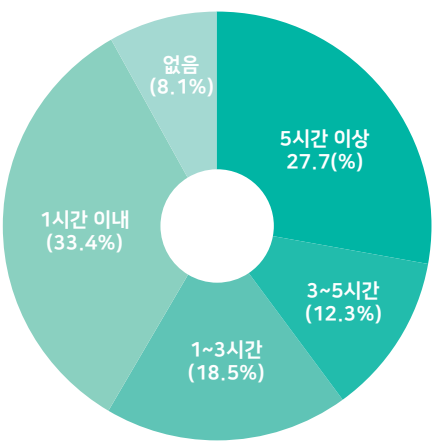
이러한 가구의 변화는 코로나19상황에서 더욱 돌봄을 어렵게 만들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초중고교가 문을 닫았고 이에 우리사회는 유래없이 심각한 돌봄 욕구를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안전·영양·학습·정신건강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돌봄 수요가 높아졌다. 그러나 갑작스레 길어진 돌봄 시간에 사회 및 가정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돌봄 공백은 커졌다. 2020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집에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은 전체의 38%로 이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27.7%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긴급돌봄 욕구에 대한 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며, 미래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아동이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20). 코로나19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그림> 아동 혼자 집에서 보낸 시간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20). 코로나19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이러한 이유들 외에도 아동돌봄의 사회화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인구절벽의 위기이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보다 줄어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0년에는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되었고, 이대로라면 2100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1,8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지만,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은 출산장려 중심의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계획을 내놓았다. 아동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자라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바람직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존 아동돌봄서비스의 한계

아동돌봄 사회화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존 아동돌봄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 한계로는 아동연령별 서비스 불균형, 서비스 주체의 다양성과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아동수요를 배제한 아동돌봄서비스체계 운영,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정 수준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연령대별(미취학, 초등학령 아동, 중고등학령 아동)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불균형적이다. 미취학아동돌봄서비스는 충분한 반면에 초등학령 아동돌봄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아동돌봄서비스 중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0.9%²⁾, 3~5세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93.7%³⁾인 반면에, 6~12세의 초등학령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약 12%에 불과하다. 6~12세의 초등학령 아동돌봄 수요를 보수적으로 40.1%⁴⁾라고 가정할 때, 수요의 약 28.1%가 아동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9년 초등학령 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중인 54.8%를 돌봄 수요로 가정할 때에는 42.8%가 아동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령 아동의 수요는 많으나 13~17세의 청소년은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중1~3)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13~17세 중 보충적 종합서비스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

2)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이용자 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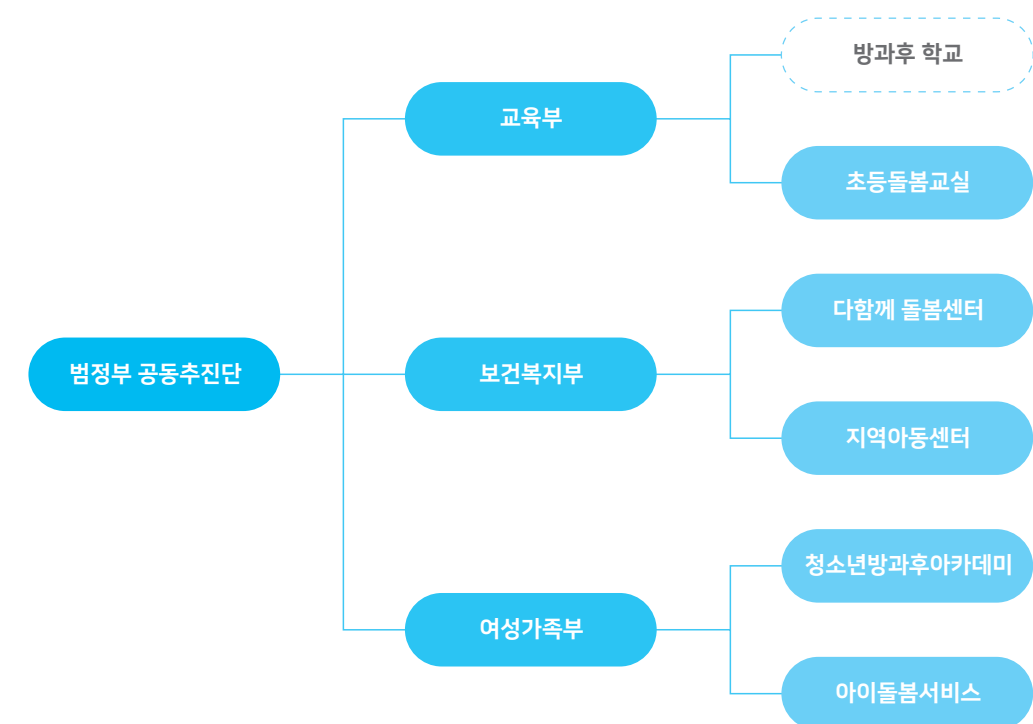
3) 육아정책연구소(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2.

4) 2019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이며, 주양육자의 응답에 기반한 결과임. 지나친 사교육 경쟁을 줄이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를 반영할 경우, 초등학령의 아동돌봄 수요는 더 커질 수 있음.

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하면, 미취학 아동과 중고등학령 아동은 수요공급 격차가 적은 편이나 초등학령 아동은 수요공급 격차가 매우 크다.

둘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주체가 다양한 반면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심해 서비스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다. 현재 아동돌봄서비스는 3개 부처 5개 돌봄체계로 분산되어 있는데, 부처간, 돌봄체계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아동돌봄서비스가 적절히 연계조정되지 못하고 행정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야기하고 있다. 크게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연계협력 미흡을 많이 지적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돌봄 내 시설들 간의 연계협력 수준도 매우 낮다. 최근 범정부 공동추진단이 지자체 중심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시도하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여전히 돌봄시설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한 연계협력사업의 강화, 아동 수요 연계 등은 미흡하다.

<그림> 아동돌봄서비스 부처-돌봄체계



주. 방과후학교는 학습과 돌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돌봄시설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셋째, 아동돌봄서비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모두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나, 사업별로 명칭, 대상연령, 운영방식이 모두 상이하여, 이용자들이 이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돌봄의 서비스 다양성 수요와 통합적 체계를 고려하여 이러한 복잡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담당부처에 따라 사업이 개별적으로 기획되고 시행되면서 이러한 복잡한 돌봄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낮추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07년부터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10년 이상 복잡한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넷째, 아동수요를 배제한 운영방식이 문제이다. 아이들은 낙인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제공받아야 하는데 돌봄시설들은 각각 운영방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아동 시설이라는 낙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는 미취학 아동 대상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고 초등학교 아동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 가장 공급자 중심의 운영으로 아동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은 초등돌봄교실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주양육자의 평균 퇴근시간이 7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후돌봄을 5시로 설정하여 아동이 학원으로 가거나 혼자 집에 있게 하고 있으며, 아동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입출입을 금지하는 등 가장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이용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아 서비스가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돌봄시설로서 정기/일시돌봄, 입출입가능, 모든 아동 이용 가능 등 아동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운영방식을 갖고 있으나 그 수가 아직 매우 적고 재정과 인력규모가 적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아동의 생활시간과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다섯째,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정 수준이 문제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교육과 돌봄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더 중요시되고 노동가치도 더 인정된 측면이 크다. 1호봉 기준으로 돌봄종사자와 교사의 인건비는 큰 차이 없으나, 호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복리후생제도의 차이와 고용안정성의 차이도 크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는 낮은 편이다. 이러한 처우는 아동에게 제공될 돌봄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코로나19상황을 겪으면서 아동에게 사회적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한 바 향후에는 아동돌봄영역 종사자의 노동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표> 돌봄시설과 교사의 임금 비교¹⁾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²⁾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담임	아이돌봄 서비스 ³⁾	초등돌봄교실	교사
1호봉	1,866,000	1,822,480	1,844,000	1,651,200	2,040,000	2,028,695
10호봉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866,973
격차						838,278

1) 2021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업안내, 교육공무원 호봉표 등에 제시된 임금을 제시함

2) 다함께돌봄센터의 서울시 버전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2,164,000원이며, 10호봉(2,561,000원)과의 격차는 397,000원임

3) 2020년 기본시급 8,600원에 주40시간 근무조건 시 월급을 임의로 계산하여 제시함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낮게 인식되면서, 교육종사자의 돌봄역할에 대한 정체성 인식이 낮은 것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놀기, 회 제공, 개별적 아동관리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아동돌봄에 대한 책임은 돌봄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II. 아동에게 필요한 아동돌봄서비스체계는 무엇인가?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증가하고, 기존 체계가 많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아동돌봄서비스체계는 변화해야만 한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체계를 아동 중심의 체계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며, 이는 기존 체계 내의 소극적 변화로는 불가능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돌봄서비스를 대전환하는 수준의 변화로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본 발제에서 제안하는 아동돌봄서비스 대전환(안)은 다음과 같다.

1) 비전

-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체계

2) 목적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가장 필요한 대응은 태어난 아이들이 살기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돌봄영역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돌봄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 공급자 중심의 파편적이면서 비효율적인 현재 아동돌봄서비스 체계를 해체하고,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아동돌봄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

3) 원칙

- 아동 최상의 이익: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이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시 행정관료 및 시설종사자와 같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이용자인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공공성: 국가 및 지자체가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 보편성: 돌봄은 모든 아동에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성별, 연령, 장애, 재학여부, 가구경제수준 등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접근성: 시간, 장소, 서비스유형의 측면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 통합성: 아동돌봄서비스 간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여 통합적이면서 책임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한다.
- 돌봄기능강화: 돌봄 본연의 기능 강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아동의 보호 및 놀고 쉴 권리 보호한다.

4) 추진전략

(1) 아동돌봄서비스 확대

아동돌봄의 미충족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 이용아동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고, 서울시는 2022년까지 맞벌이가구 아동의 30%에게 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맞벌이가구가 50~60%에 이른다는 점과 외벌이가구도 돌봄서비스 요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표는 불충분하다. 태어난 아동을 잘 키우는 사회가 되려면 목표는 수요충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돌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학교는 저학년의 아침돌봄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신청을 꺼려하는 문화를 바꿔내야 한다. 또한 점심시간, 노는시간, 쉬는시간을 늘려 학교시간을 월-금 3시 이후로 통일해야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고 쉴 기회를 더욱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의 여가시간 결핍 욕구, 친구와 노는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하교시간 통일은 주양육자와 마을돌봄시설들의 복잡한 스케줄 관리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마을돌봄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2년까지 1,817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약 14,000실의 초등돌봄교실에 비하면 이또한 부족하다. 학교 하교시간이 3시 이후로 통일되었을 때의 돌봄수요를 추계하고, 이 수요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 공급시설 수를 추제한 후 필요한 만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여가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중고등학령 아동의 경우 집중적인 돌봄서비스보다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센터 등과 같은 문화여가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

현재 중앙정부 3개 부처는 아동돌봄서비스 기획, 재정, 관리감독 등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 칸막이 현상이 심하여 서비스체계 간의 상호보완적 효과가 미약하고, 서비스 연계조정이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특별위원회(사회부장관이 위원장, 최소 3인 이상의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돌봄협의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체계를 구성하고 학교 및 마을돌봄 연계조정하게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학교, 마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온종일돌봄협의회는 지자체 아동돌봄계획 수립, 아동 수요 연계, 협력 사업 실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온종일돌봄협의회는 광역온종일돌봄협의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마을온종일돌봄협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아동돌봄서비스 재구조화

첫째, 초등 및 중고등학령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를 모두 통합한다.⁵⁾ 다양한 돌봄시설이 존재하나, 실제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시설별 명칭이 상이하고 대상연령기준도 달라 체계가 복잡해진 상황이다. 모든 아동에게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돌봄시설을 모두 통합하여, 초등 및 중고등학령 아동 돌봄에서는 ‘방과후센터(가칭)’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대상연령기준도 초등학령아동 방과후센터는 6~12세, 중고등학령아동 방과후센터⁶⁾는 12-18세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둘째, 방과후센터로 통일하되 서비스 다양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장소를 기준으로 학교, 마을에 방과후센터가 있고,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 또한, 아동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모든 시설에서 정기돌봄, 일시돌봄,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입출입을 허용한다. 또한 방과후센터 간의 경계를 허물고 아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센터를 연계하고 센터간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5)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방과후센터로 통일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폐지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학습기능은 학교 방과후교실로 이전한다.

6) 중고등학령 아동은 돌봄욕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중고등학령 아동 방과후센터는 돌봄+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유사하며 대상은 중고등학령 아동으로 제한한다.

셋째, 아동돌봄서비스기관은 돌봄 기능에 집중하고, 그 외 서비스수요는 책임있는 연계협력을 통해 충족시킨다. 방과후센터는 돌봄서비스에 집중하여 돌봄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나 기타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위센터에 연계한다. 학습 수요는 학교 내 방과후학교를 연계하여 충족시킨다. 방과후센터는 이러한 연계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아동이 서비스누락이나 배제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책임있게 점검해야 한다. 자원연계 수준이 아니라 아동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넷째, 아동육구기반으로 서비스별 기능 차별화가 필요하다. 아침돌봄은 초등저학년들이 필요로 하며, 돌봄수요자체가 높지는 않고, 서비스시간이 짧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아침돌봄은 가장 접근성이 높은 학교 방과후센터 또는 가정돌봄인 아이돌봄서비스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방과후센터에서 오후돌봄을 7시까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녁돌봄육구는 많지 않으므로 학교와 마을의 방과후센터 일부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권역별로 서비스를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시돌봄은 아동의 생활시간과 장소 선호도를 고려하여 모든 방과후센터에서 실시해야 한다. 아픈아이는 가정 내에서 돌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가 담당해주어야 한다. 모든 방과후센터는 장애아동, 학교밖아동, 이주아동 등 다양한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이 많은 경우에는 장애아동돌봄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4)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돌봄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상향 평준화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능한 종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되며, 직무동기도 향상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돌봄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및 마을 돌봄종사자 간의 일자리 질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 전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체계				
목 표	태어난 아동을 잘 키우는 돌봄체계 구축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돌봄체계 구축		
원 칙	아동 최상의 이익	공공성	보편성	접근성	통합성
추진전략	아동돌봄서비스 확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		아동돌봄서비스 재구조화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새로운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기 능		돌봄 (정기/일시/긴급돌봄, 입출입 가능)			돌봄 + 복지
연 령		초등학령 아동 (장애, 학교밖, 이주, 아픔 등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중고등학령 아동
시 간	오전 9시 이전	방과후센터 (학교)		아이돌봄 (가정)	
	오전 9시 ~ 오후 3시	학 교			
	오후 3시 ~ 오후 7시	방과후센터 (학교)	방과후센터 (지역사회)	아동돌봄 (가정)	방과후센터 (지역사회)
	오후 7시 이후	필요에 따라 일부	필요에 따라 일부 (권역별)		필요에 따라 일부
연 계		■ 사례관리 및 복지 : 드림스타트, 위센터, 복지관 등 ■ 학습 : 학교 방과후교실 ■ 문화여가 :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센터 등			

III. 아동돌봄서비스 대전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동돌봄서비스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 재정,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기반의 이해관계자들 간 대타협,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먼저**,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작년에 발의된 온종일돌봄특별법과 같은 법의 제정을 통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리더십 및 예산 변화 등과 같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대전환이 추진되게 해야 한다.

둘째, 통합적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아동돌봄에 사용되었던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건복지부 예산,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돌봄계획에 따라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아동돌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돌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 때문에 통합적 아동돌봄서비스 구축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아동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타협이 있어야만 대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이슈를 대타협으로 바꿀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미취학아동돌봄하면 어린이집이 떠오르듯 초등돌봄과 중고등돌봄은 방과후센터가 떠오르게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대상의 보편성과 시설이 누구에게나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아동에게 교육과 돌봄이 둘다 필요하다는 정보를 알려 많은 아이들에게 놀고 쉼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서 학교와 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돌봄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곳으로 인식되나 돌봄이 아이들을 위한 곳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론 01

—

아동중심 돌봄의 가치와 역할을 높이자

민 태 호 사무처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아동중심 돌봄의 가치와 역할을 높이자

민 태 호 사무처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눈치와 죄책감을 주는 돌봄에서 관심과 행복을 주는 돌봄으로 전환하자

내 첫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해인 2009년에 우리 가족은 당시의 정부에서 유일하게 야간돌봄(경기도교육청 꿈나무안심학교)을 시범운영하는 학교 앞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입학하면서 어린이 납치와 유괴 기사로 노심초사해야 했다. 그러나 1학기만에 딸 아이는 초등돌봄교실 자체를 그만 두었고, 남편인 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었던 아내가 하던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이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다.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 가장 잘한 교육정책 1위가 초등돌봄교실이고, 2020년 교육부의 초등돌봄 수요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학교돌봄교실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대란으로 대량해고된 실업자의 성별비교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2배 가까이 실직하였다.

야간돌봄 시범학교 앞으로 이사까지 간 우리 가족이 결국 초등돌봄교실과 결별한 것은 눈치와 죄책감 때문이었다. 가끔 퇴근후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3분에 1로 줄어든 돌봄교실에서 차례대로 찾아오는 부모를 기다리며 앉아있을 딸아이를 보면서, 2개 교실을 한꺼번에 전담하는 초등돌봄전담사 선생님의 피곤에 찌든 얼굴을 보면서, 부모로서 눈치와 죄책감에 시달렸다. 더 많은 육아를 담당한 아내는 더 심했을 것이다.

작년에 초등돌봄 시간제 차별사례를 조사하다가 1학년 때 8시간 전일제교실에서 2학년 때 4시간 돌봄교실로 배정되어, 돌봄교실이 시작될 때까지 화장실과 주차장을 배회하며 방과후 돌봄공백과 안정에 노출된 아이들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그 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고 또 눈치보고 학교돌봄을 포기하거나 학원뽕뽕이를 돌릴까 걱정되었다. 아이들의 상실감과 상처가 가슴아팠다.

IMF 외환위기 이후 또 다시 코로나 위기가 찾아왔으니, 내 한 몸 책임지기도

어려운 저임금 고용불안 시대에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을 느끼겠는가. 청년들과 여성들의 이른바 결혼파업, 출산파업으로 출산율이 0.8명으로 주저앉은 대한민국은 이제 소멸도시 시대에서 소멸국가 시대로 접어들었다.

눈치와 죄책감을 주는 돌봄에서 애정과 행복을 주는 온종일 돌봄운영체제가 하루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진보교육감 시대에 혁신학교 교무실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의 교육철학을 느끼고 돌봄교실 양적 확대의 부작용을 지켜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아동중심의 돌봄체계 수립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의 벽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동시에 교사들의 교육열정을 꽃피우게 하는 ‘배움의 공동체’ 혁신교육의 희망과 함께 학교교육의 역할 확대에 대한 새로운 전망도 세우는 시간이 되었다. 관심과 행복을 주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말하기 전에 학교돌봄에 대해 진단과 전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상급식 정책으로 열린 진보교육감 시대와 학교교육의 역할 확대

지난 3월 올해 서울시민 2,075명 정책투표 결과로 '교육정책 10년' 최고 변화로 1등 무상급식, 2등 무상교육을 뽑았다. 2009년 처음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에서 전교조 색깔론 공세와 무상급식 교육복지의 구도에서 결국 누가 이겼는가. 교육복지 확대를 바라는 민심이 불려온 진보교육감 시대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인력(학교비정규직)의 대거 채용으로 이어졌고 혁신교육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교육복지와 혁신교육을 위해 대거 채용된 학교비정규직이 벌써 40만명 가까이 되었다. 코로나가 풍토병이 되어 인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필수 돌봄 시대에,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육주체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더욱 절박하게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할 때이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에 이어 돌봄의 질적 개선을 촉구하는 무상돌봄, 공적돌봄이 돌풍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돌봄업무는 교사들에게 기피 업무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할 내가 돌봄 같은 뒤치다꺼리를 왜 하고 있지라고 많이 느낀다.” -2020년 11월6일 초등 돌봄전담사 하루파업 당일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국교총 박승란 교육정책연구소장 인터뷰-

위 인터뷰의 연장에서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교원단체들의 외침은 교수학습에 집중하고 싶은 교사들의 강한 욕구로 읽고 싶다. 그러나 지금 돌봄을 둘러싼 갈등은 코로나를 겪으며 매우 감정적으로 증폭되어 있다. 이에 학교교육의 역할에 대해 교육주체들의 이성적인 토론을 위해 공동의 요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가치 논쟁 이전에 학교돌봄의 숙제인 ‘돌봄시간제 폐지’

가장 잘 한 교육정책 1위이고 학부모 만족도 95%를 기록하는 초등돌봄교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코로나 위기와 함께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교육주체들 사이에 갈등도 증폭되었다. 코로나 위기에 개학이 연기되고 학생들의 교실문은 닫혔지만, 긴급돌봄 교실문은 열고 학생들이 등교했고 운영시간도 업무량도 가중되었다. 이에 84%가 단시간제 근무인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기본업무에 더하여 긴급돌봄에 시달렸고, 교사들은 행정업무가 가중되었으며, 초등돌봄교실은 법령이 없어서 방역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든 학부모단체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운영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초기에 8시간 근무자였던 많은 돌봄전담사들은 오후5시 이후 학생수요가 적다는 이유와 학교장들의 관리업무 부담으로, 단시간제로 강제 전환되었다. 교사들은 돌봄에 대한 업무배제를 강력히 원하고, 돌봄전담사들은 시간제 차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운영시간 확대 - 교사들의 돌봄업무 배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이 결국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사들은 교수학습에 집중하고, 학부모들은 출근전이든 출근후든 학생들의 돌봄운영시간 확대로 안정감을 찾고, 돌봄전담사들은 시간근무제 차별 폐지로 학교가 이성을 찾은 가운데 초등돌봄의 역할과 온종일돌봄체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법제도 정비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아동돌봄의 공백이 없는 온종일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첫 번째 숙제는 예산 문제 해결이다. 정책의 가치판단은 결국 예산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학교돌봄은 학교직영으로 학생1인당 운영비가 지자체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실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85.5%가 중단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전국 지자체 재정순위 상위권인 서울 중구청의 돌봄모델조차 지속가능성과 일반화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진단들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에 600조원의 슈퍼예산을 짤다고 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추어 2019년 지방재정 순증액만 6조6천억원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좋은 신호인데 전반적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단체장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차이가 커서 지역돌봄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두 번째 숙제는 온종일돌봄 협력체계 마련이다. 해외는 지자체 내에 교육국에서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체계도 많지만, 우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완전히 분리되어 교육감 선거를 직선으로 한다. 법률상 교육부, 교육청의 예산은 내국세의 20.79%로 지자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지자체의 교육국 체제라면 교육국에서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예산도 조

직도 분리되어 있으니 통합재정과 통합조직 운영은 갈 길이 너무 멀다. 결국 온종일 돌봄 협력체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상시전일제 돌봄교실로 정비하고, 프로젝트조정자를 두는 교육복지우선사업 등을 참조하여 교육지원청이 돌봄센터를 만들어 학교돌봄 운영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지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시도교육감은 시도지자체와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시군구교육장이 시군구지자체와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학교마다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교원 관리자의 실무부담을 교육청이 맡을 수 있다.

한편, 교원단체나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부장관이 총괄하는 권칠승의원의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을 수정하여 온종일돌봄체계를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총괄(기본계획 수립 주체)하자고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령기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돌봄을 이용(약30만명)하는 데,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을 총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정부기구인 온종일돌봄 현장지원단을 내실화하고 시도별,지자체별 실무협의회에 학부모와 돌봄전담사를 참여하게 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세 번째 숙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법제도적 규율이다. 지역아동센터,아이돌봄사업 등 (보건복지부,여가부를 통한) 지자체돌봄은 법률이 있다. 그러나 학교돌봄은 법이 없어 코로나 초기에 방역공백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다. 2004년부터 방과후에 편성된 초등돌봄교실은 민주당이 슈퍼여당이 된 이후, 2020년 5월 교육부가 법제화안을 올렸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너무 쉽게 무산되어 많은 학부모들과 돌봄전담사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상처가 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2월13일자 이슈와 논점에서, 교육복지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학교비정규직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마당에 2004년 이후 17년간 법적 근거가 없던 초등돌봄교실 법제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른들의 갈등으로 초등돌봄교실이 법이 없

으니,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네 번째 숙제는 학령기 돌봄정책이 경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치와 역할을 높이고 보편화하는 일이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돌봄노동과 보육정책이 얼마나 소중한 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나 돌봄노동은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사회화되면서 아직 가부장 질서의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도성장과 발전에서 희생되었던 여성들의 권리와 돌봄노동의 소중함을 지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 초등돌봄의 시간근무 폐지와 전반적인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경제적 측면의 실증효과 말고도 여성노동의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과거 경쟁의 희생이 된 진주의료원 폐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이었지만, 실질적 예산을 감당하는 지자체가 권한이 있다는 미명아래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으로 강행되었다. 법제도의 규율과 예산이 만들어져도 경쟁의 희생이 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돌봄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IMF 이후 실업,저소득가정 어린이 공부방의 창립교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 아이들의 격한 애정욕구와 학습열의를 보듬고 가기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었던 그때의 보람과 고통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자체는 지역돌봄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고 학교는 교육청 돌봄센터를 통해 아이들 중심의 온종일 돌봄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한마디가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사회를 조금이나마 바로잡는데 밑알이 되었으면 한다.

토론 02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송 영 진 마을돌봄TF팀장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송영진 마을돌봄TF팀장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토론 03

—

팔소 없는 찐빵 정책과 다섯 가지 대 전환에 대한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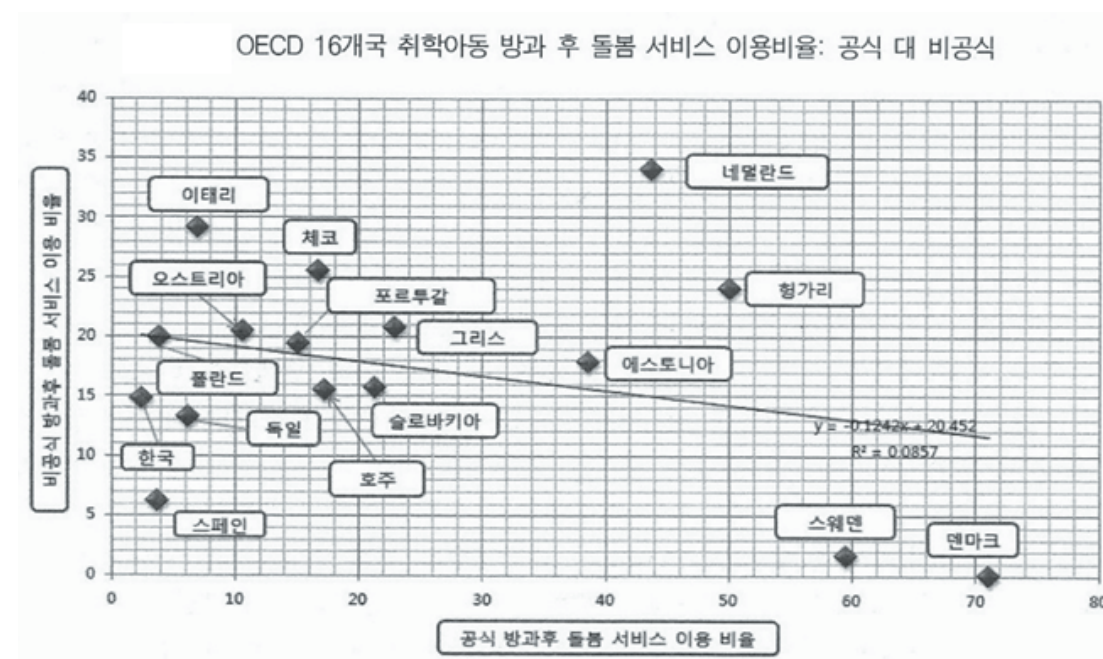
옥경원 대표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팔소 없는 찐빵 정책과 다섯 가지 대 전환에 대한 토론

옥 경 원 대표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온종일 돌봄은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공공의제(Public agenda)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식한데서 시작한다. 또 정부는 이를 공식의제(official agenda)로 정해 법제화나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국정과제로써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발제문도 공식의제로 정해진 온종일 돌봄의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만 과거의 사실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온종일 돌봄이 공식의제로 전환되었을 당시(노무현 정부 2003~2007)의 이슈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둘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셋째,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보육기능 확대 넷째, 학교시설의 활용 극대화과 다섯째,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연계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자원 활용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금에 이르러 조목조목 냉정하게 살펴보면 여전히 그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0년a >

위 도표는 2010년a 당시 OECD 16개국 중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공식 대 비공식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다. 한국은 비공식적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공식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은 OECD 꼴찌 수준이었다. 당시, 정부가 공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지금에 이르러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관료 중심의 성과주의와 일관성 없는 정책들은 시시때때로 현장을 몸살하게 했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기는커녕 갈피를 못 잡았다. 전 정부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온종일 돌봄에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기초를 가졌고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마을 돌봄 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서울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외)와 학교 돌봄 영역에서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와 같은 유사 사업을 속속 등장시키고 있다. 정책이 왜 이럴까? 그야말로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존체계들을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보다 새로운 체계들을 만들어 돌봄 생태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에 맞추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맥락은 빠지고 정량적 성과로 해석되어 ‘팔소 없는 찜빵’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덕에서 오는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아이들과 현장 몫이 되고 있고 추진되고 난 후의 돌봄 생태계 혼란도 돌이킬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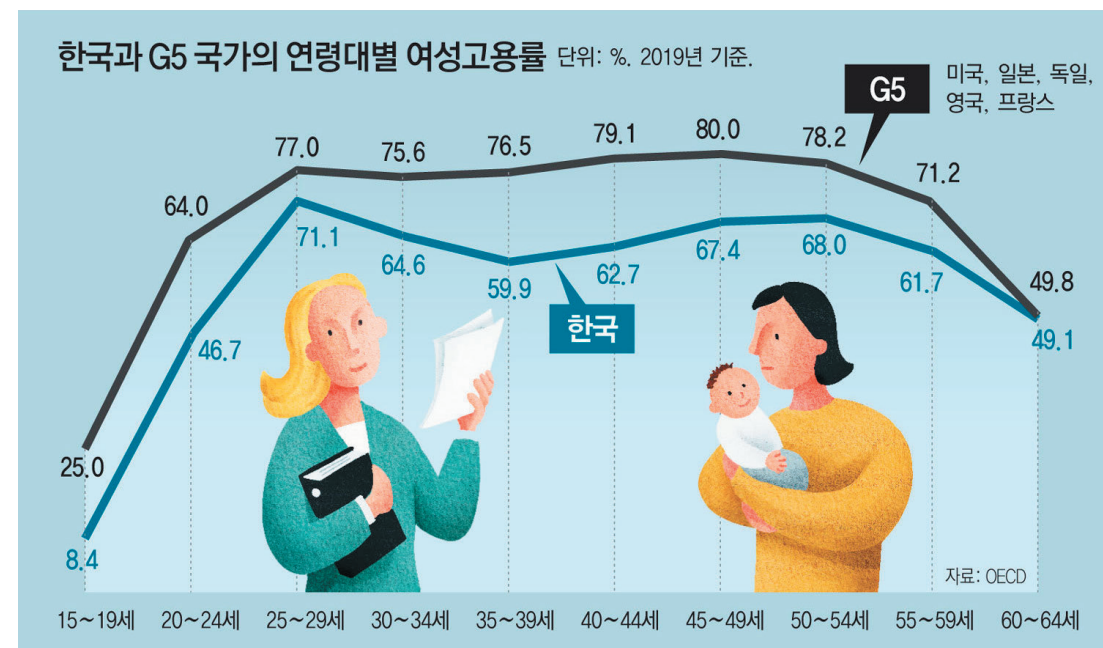
1. 본질을 이야기하다.

발제문을 접하고 처음 머리에 스친 단어는 ‘본질(essential)’이라는 단어다. 이 토론회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이자 발제자가 의도하고자 한 본질은 함축적인 선언으로 시작된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NO!’라고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 돌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고 기존 돌봄 체계들은 서로 여러 한계에 부딪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게 한다. 아동의 이익이나 아동 중심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상호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묶여 사회적 요구에 통찰력 있게 대응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사실상, 복잡하고 다양한 체계들이 서로의 입장에서만 강대 강으로 대립하게 되면 결국, 아동의

이익은 배제되기 마련이다. 대개 이런 경우 큰 소리를 내는 집단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 결국은 이런 비본질적 싸움의 격전장은 전체의 실패로 돌아간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다음세대로 유전된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의 아동 중심의 요지는 매우 분명하고 확신에 차 보인다.

2. 대전환의 다섯 가지 전제

발제문의 중심 키워드는 ‘아동 돌봄 서비스의 대전환’이다. 왜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택했을까?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균형을 전제한다. 이용자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 학교와 지역사회의 낮은 연계 협력, 유사체계들의 난립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낙인감,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 저평가의 다섯 요인을 들어 지적한다. 이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 온종일돌봄체계의 오랜 현장 실천가로서 나는 전적으로 공감이다. 먼저, 여성의 고용에 대한 M자 곡선에서 첫 번째 위기가 결혼, 임신, 출산이라면 두 번째 위기는 바로 돌봄의 문제다. 바로 ‘경단녀’(經斷女), 또는 ‘맘충’으로 비하되는 상황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이 시대 여성들이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M자 곡선의 숙제다. 여전히 아동 돌봄은 한 가정의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돌봄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혹자들은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는 어젠더만 이야기하곤 한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시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 전체의 틀을 움직이는 문제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동 돌봄의 현재 진행형 상황에서는 사실상 “지금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지나친 생각일까?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큰 사회의 틀을 움직이는 것과 아동 돌봄 현재 시점의 대전환은 함께 가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돌봄 협의체를 만들어 조성하려 했다. 학교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돌봄 협의체 현장은 결과적으로는 흐지부지 되었다. 중앙, 시도, 시군구의 돌봄 협의체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여러 번 참여했지만 특징이 별로 없었다. 이 무게추가 이제는 지방정부로 넘어왔다. 하지만, 그동안 협조가 부족했던 지방정부가 이제 나선다고 갑자기 협조체제로 굳혀질까? 매사에 이런 식의 공 던지기 방식은 현장의 협력이나 전체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온종일돌봄체계의 원톱 체제가 필요하다.

유사체계들의 난립은 초기 돌봄 생태계의 구조와는 앞서 언급한대로 완전히 달라졌다. 시작은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으로 구조화 되었다. 유사중복 사업 폐지라는 과정을 거치다 다시 난립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성과주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처의 같은 국, 과에서 동일한 돌봄을 시행하는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돌봄 체계의 통합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예산의 불합리성과 상대적 결핍감 등 현장에 끼치는 부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 특히 낙인감은 예산과 작동하면서 여전히 문제다. 정부는 일반아동을, 민간은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세계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만일, 노인에게 이런 낙인 요인들을 남겨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민낯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의 저평가에 대한 지적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최근 보도된 온종일 돌봄 관련 기사들을 토대로 보면 학교는 돌봄과 교육을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교육은 교육부에서 돌봄은 해당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개별적인 영

역으로 구분하고 또 그것을 전문성으로 대비하곤 하는데 사실, 그 논리에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언급이 일부 교육자들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사회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은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학창시절 12년 간 내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이 몇 분이 계신다. 돌이켜보면 내 존재와 꿈에 영향을 끼친 그 분들은 ‘교육’과 ‘돌봄’을 적절하게 병행했던 분으로 기억된다. 그렇듯,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에 ‘돌봄’과 ‘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것과 저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구분지어서도 안 된다. 마치,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근육(돌봄 체계)이 없으면 교육(뼈대)가 바로 서지 않는 것과 같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육이다.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면서 공교육은 큰 위기감을 맞이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사교육에서 학습하고 공교육에서 평가받는 역설적인 구조는 여전히 학교의 권위를 애처롭게 하고 있다. 사교육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돌봄’의 영역을 학교가 도외시한다면 우리 사회가 기대한 사회적 권한 위임의 여부를 의심하게 된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의무교육이 시작되면서 학교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통학의 습관을 갖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당시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까지 했는데 이처럼 교육자들에게 시민사회가 사회적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산업혁명시기에는 양질의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교육의 일환이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사회가 학교에 집중하고 부여했던 이 모든 권한들은 사회변화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다. 사회구조가 바뀌고 삶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개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기성세대에 대한 꼰대리즘의 비판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4차 산업으로 인해 직업 생태계는 두말 할 것도 없다. 지식의 전달은 인공지능이 탁월하다. 그리고 모든 체계들이 코로나19로 새로운 문명 적응에 홍역을 앓고 있다. 적자생존의 시대, 민주사회로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기희생으로 부여한 교권에 대한 사회적 권위는 점차 축소되거나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다.

아동 돌봄은 우리사회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트렌드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3. 추진전략에 대하여 체계들의 행동을 제언하다.

아동 돌봄 서비스의 총량 확대에 대하여는 100% 공감한다. 지금과 같은 체계들을 난립으로 오는 체계의 확대는 제고해야한다. 이제는 체계 간 통합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의 두 개념의 재구조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합의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발제문에서 언급된 다섯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하겠다. 즉, 이용자 수요 대비 공급의 균형, 학교와 지역사회의 높은 수준의 연계 협력, 유사체계들의 통합 및 접근성 확보, 낙인감 해소와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등 온종일돌봄체계를 보다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틀을 발전적으로 짜야 한다. 보다 정교한 법률 제정과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직면한 과제가 되었다. 이제, 아동 돌봄 대전환의 Paper가 각자의 테이블에 던져졌다.

토론 04

—

토론문

이경아 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토론문

이 경 아 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존의 교육부 초등돌봄 사업을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신설), 지역아동센터(기존)와 연계하여 아동의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공적 아동 돌봄서비스의 확대는 공급자 중심의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편주의로, 성숙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도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하고 또 다른 여러 난맥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고 중단될 수 없는 성격의 정책과제이기에 오늘의 토론회를 열어주시고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발제문에 제시된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과 기존 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아돌 돌봄기능 강화의 원칙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위에 공공성, 보편성, 접근성, 통합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토론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추진전략에 대해서 각 단체가‘아돌 최상의 이익’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동돌봄서비스 확대 전략에 대한 첨언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영역은 서비스 수혜자, 운영시간, 공간, 인력의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발생하는 가장 큰 표면적인 문제는 서비스 신청자 모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다소 선별적으로, 때때로 모호한 기준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정해진 물량에 수요자를 맞추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신청 절차를 지자체와 함께 다변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더해지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개선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발제자는 아동돌봄 수혜자를 청소년까지 포괄하고 정규교육 시작 전 아침돌봄 서비스까지 운영시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3시 하교를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돌봄체계구축을 전제로한 3시 하교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3시 하교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럼에서 이미 큰 쟁점이 된 바가 있다. 당시 위원회의 제안은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큰 흐름이며, 세계적으로도 초등학생이 오후 3시 이후에 동시에 하교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일제히 하교시간 연장의 일률적 시행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당시 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교사는 “하교시간 연장 시 업무시간 증가로 교원의 수업연구와 준비시간 부담이 커짐”을 지적하면서,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가 일찍 퇴근해 정서적 교감을 늘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며, “현재 여건에서 놀이와 활동시간 증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하였다.¹⁾ 저출산고령사회위원

1) “교사부담 커진다”...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제안 반발하는 초등교육계(중앙일보 기사, 2018. 8. 28)

2) 모두놀터 프로젝트 보고서(강원도교육청, 2019)

회는 여론수렴을 거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추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었으나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3시 하교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원-놀이밥공감학교, 전북-놀이밥학교).

강원도교육청의 놀이밥공감학교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충분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의 조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놀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놀이밥 100분 개념을 도입해 1교시 전 아침놀이, 중간놀이, 점심시간, 방과후시간 등 개별 학교 여건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놀이밥공감학교 초등학교 1~2학년 시간표(예)>

구분	시간
등교	9:00
아침 놀이밥(30분)	9:00 ~ 9:30
1~2교시(블록수업 80분)	9:30 ~ 10:50
중간 놀이밥(40분)	10:50 ~ 11:30
3교시(40분)	11:30 ~ 12:10
점심식사와 점심놀이밥(90분)	12:10 ~ 13:40
4~5교시(블록수업 80분)	13:40 ~ 15:00
하교	15:00

출처 : 강원도교육청

놀이밥공감학교는 2018년 40개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3년차인 2020년에는 74개교(도내 21.3%)가 참여중인데, 도입 당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교사 업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큰 무리 없이(안전사고 보고 없음)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교사 부담 역시 외부강사나 돌봄교사, 학부모지원단 등의 참여로 부담을 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동의 놀이시간을 보장하는 3시 하교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담보하고 있느냐하는 실제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놀이밥공감학교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아동들은 놀이시간, 놀이 활동, 친구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고, 교사도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²⁾.

영유아교육과 보육 확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대부분이 4시 이후 하원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점³⁾과 놀이밥학교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사례와 교육계의 여러 우려를 종합해 볼 때, 만약 3시 하교가 추진된다면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내 여건과 다른 돌봄자원들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정 부분 초등학교의 선택권을 부여한다든지, 지역의 돌봄수요조사 항목에 3시 하교를 포함하여 질문하고 지역 내 초등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초등학교 일과표(예)>

구분	시간
등교	9:00
1교시(40분) / 쉬는시간(10분)	9:10 ~ 9:50 / 10:00
2교시(40분) / 쉬는시간(10분)	10:00 ~ 10:40 / 10:50
3교시(40분) / 쉬는시간(10분)	10:50 ~ 11:30 / 11:40
4교시(40분)	11:40 ~ 12:20
점시간(50분)	12:20 ~ 13:10
5교시(40분) / 쉬는시간(10분)	13:10 ~ 13:50 / 14:00
6교시(40분)	14:00 ~ 14:40
하교 및 정리	14:40 ~ 15:00

초등학생의 학년 별 수업시수는 1~2학년군 1,744시간(주당 23시간), 3~4학년군 1,972시간(주당 26시간), 5~6학년군 2,179시간(주당 29시간)⁴⁾에 이르며, 초등학교 일과표를 함께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6교시 일과를 진행할 경우 3시 하교를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일별 수업시간을 보면 5~6학년의 경우에는 이미 실제적인 3시 하교에 도달하고 있고, 담당교사는 주당 40분 정도의 추가부담으로 업무증가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2학년 담당교사는 주당 280분(수업시수 7), 3~4학년 담

4) 학년군 수업시수는 1시수당 40분 기준으로, 2개년 시수의 합이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수업주수는 38주이다.
5) 수업시수가 증가할 경우 쉬는 시간(1시수 당 10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시간 증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슈도 존재한다.

당교사는 주당 160분(수업시수 4)의 업무증가가 발생한다고 추산⁵⁾된다. 이 경우 3시 하교를 운영하는 학교에는 1~4학년 담임교사의 하교시간 연장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놀이시간에는 놀이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면밀한 정책설계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요일별 수업시간(예)>

	월	화	수	목	금	주당 수업시간	주당 추가시수
1학년	5	5	4	5	4	23	+7 (280분)
2학년							
3학년	5	6	4	5	6	26	+4 (160분)
4학년							
5학년	6	6	5	6	6	29	+1 (40분)
6학년							

* 1 수업시간은 40분을 의미함
** 주당 추가 시수 산출시 쉬는 시간(각 10분)을 포함해야 하는 쟁점도 존재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수혜대상, 운영시간과 공간, 인력 등의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이용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지루한 논의를 복기해 본다면 수혜대상자 확대와 함께 공간, 인력, 안정적 예산 등의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정책 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3시 하교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방학 중 돌봄이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포괄적인 돌봄 공간과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토론문은 3시 하교 시행을 상정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발제자의 제안에 대한 토론문으로 작성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개정의 논의와는 연계되지 않은 구상인 것도 밝혀두는 바이다.

토론 05

—

아동돌봄서비스의 전환점을 기대하며

이 상 무 교수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돌봄서비스의 전환점을 기대하며

이 상 무 교수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동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분석과 거시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리며 발표 내용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아동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조정, 서비스의 다양화와 재구조화, 돌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의 추진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오랫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제한된 토론 시간을 고려하여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 시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와 국민의 아동돌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돌봄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표하는 학교와 학원의 틈바구니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이 낮은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투자가 인색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아동돌봄서비스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편협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아동돌봄은 단기적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과 동등한 가치를 추구하며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전문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초등아동돌봄을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즉, 아동 돌봄을 국가의 책무이며, 아동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아동돌봄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자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아동교육 및 돌봄(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정책의 경우 돌봄(childcare)과 유아교육(early education) 영역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저평가된 아동 돌봄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아동 돌봄이 전문서비스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는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의 경우,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발달에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보장, 표준화되고 과학적인 교육프로그램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학습-놀이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돌봄 시설은 학교나 학원과 달리 **아동의 스라벨(Study and Life Balance)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아동 관리가 아니라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놀이혁신 선도사업’은 돌봄 시설의 프로그램 혁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아동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를 개인의 경제적 욕구로 간주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제공인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전략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아동 돌봄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간주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과 국가자격증

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제도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 돌봄 프로그램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서비스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설 운영의 지도점검과 시설평가에 주로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은 프로그램 체계의 개선,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서비스 공급 주체와 공급 방식(경로)의 다원화와 지역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동 돌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서비스 공급량의 100%를 책임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서비스 공급량 확대와 지역적 상황에 맞는 서비스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면, 차선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다함께돌봄센터 증설로 서비스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절대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온종일돌봄체계는 공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공급량 확대의 속도가 충분하지 않고, 공급량 조절의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온종일돌봄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공급 모델을 발굴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Community Care)처럼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도록 중앙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러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 심도를 더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 법률, 문화 분야 전문가들까지 논의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논의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06

—

아동중심의 돌봄 서비스 대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토론문

정온 위원장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아동중심의 돌봄 서비스 대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토론문

정 온 위원장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저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학부모' 혹은 '부모'라는 단어 대신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아동돌봄 사회화 필요

아동돌봄서비스의 주체가 다양하고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보호자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지와 가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령기 아동을 위한 초등돌봄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시민이 아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연령에 따라 학교에 모든 책임을 밀어넣은 결과다. 비슷한 업무를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그것도 가장 관련 없는 부서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돌봄보다 사회 구조 개혁이 중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아동돌봄서비스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긴급돌봄을 현재와 같이 무조건 학교에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체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 그런데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출생률의 변화가 유의미한 관계라는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태어난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보호자의 노동 현실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이 아쉽다. 노동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돌봄에 대한 공백은 언제나 존재하고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라는 인식은 바꾸기 어렵다. 노동자의 가정 유지에 도움을 주는 회사, 아동 돌봄을 위해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회사 등에 혜택을 주는 접근도 필요하다.

학교돌봄

돌봄 수요를 돌봄서비스 이용률만으로 비교할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미취학 학령에서는 학교 대신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한다. 이것을 초등 중고등 돌봄 서비스 이용률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로, 학령기 아동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신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후의 시간에 돌봄 서비스 수요가 있다. 애초에 단순 비교가 의미가 없으므로 초등 돌봄 수요 중 42.8%가 아동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거나, 미취학 아동과 중고등학령 아동은 수요공급 격차가 적은 편이나 초등학령 아동은 수요공급 격차가 매우 크다 등의 내용 전개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 장소가 모자란다면 돌봄겸용교실을 지어 한 교실에서 낮에는 수업 방과후에는 돌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본연의 역할인 학생들의 배움과 교육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본인 교실에서 마치 손님처럼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2020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간 공동사용시 문제가 심각하다. 돌봄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학교는 학생들의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다. 따라서 다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침돌봄의 경우에는 교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아침 일찍 학교에 와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마땅히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학생이 교사의 출근시간 전 학교를 배회하며 교실에 입실하지 못하는 상황은 대단히 위험하다. 저녁돌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과 후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수많은 외부인이 드나든다. 운동장은 동네 주민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체육관은 동호회 등이 대관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저녁 시간 학교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원이 적고 물리력이 약한 학생과 돌봄 종사자가 학교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아동과 돌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거점돌봄시설을 지역에 마련하고 각 학교의 저녁돌봄아동을 모아 돌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학교시간 통일은 반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초등학생 돌봄실태 파악 및 수요분석 연구>에 의하면 학교 정규수업 종료 시간에 만족하는 비율이 58.6%로 높다.

<강원도교육청 놀이밥공감학교 초등학교 1~2학년 시간표(예)>

구분		만족한다	지금보다 더 늦게 끝났으면 한다	지금보다 더 빨리 끝났으면 한다
전체		58.6	38.8	3.1
학년별	1학년	49.6	48.5	1.9
	2학년	56.6	41.0	2.5
	3학년	57.2	40.6	2.2
	4학년	63.4	31.8	4.9
	5학년	66.0	29.5	4.5
	6학년	64.9	31.3	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54.5	43.2	2.3
	비맞벌이	65.3	30.2	4.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67.7	21.6	10.7
	200~300만원 미만	60.6	34.4	5.1
	300~400만원 미만	58.7	39.3	2.0
	400~500만원 미만	60.9	36.5	2.6
	500~600만원 미만	59.4	37.4	3.2
	600만원 이상	54.3	42.8	2.9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를 분석한 것임

하교시간을 월-금 3시 이후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아동은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학습 시간이 다르다. 단순히 점심시간, 노는시간, 쉬는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아동의 피로도를 낮추기는 어렵다. 특히 1학년 학생의 경우 ‘교실에 바르게 앉아있기’ 자체가 학습목표인 수준이다. 학교는 학생의 휴식을 위해 지어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놀 시간을 준다고 해서 편히 쉬기는 어렵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구와 달리 학교는 책걸상이 교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부하는 공간에서 낮잠을 자거나 간식을 먹으라고 지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학급 구성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또래와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주양육자와 마을돌봄시설들의 복잡한 스케줄 관리 부담 때문에 교실에 학생들을 3시까지 가둬두는 일은 아동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다.

학생들이 월-금 중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언제일까? 바로 수요일이다. 수업이 다른 때보다 1시간 적어서, 일찍 끝나는 날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을 좋아한다. 쉬면서, 놀면서 3시까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른들만의 생각이다. 학교에서 놀이 시간, 쉬는 시간은 공간이 고정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제한된다.

하교시간 이후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사교육을 받는데 학교 하교시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학생들의 귀가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학교에서 3시에 끝난다고 학원은 보내지 않을까? 입시제도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단순히 돌봄만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돌봄 편의를 위한 일괄 3시 하교는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교사와 돌봄종사자 비교는 의미없음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정 수준이 문제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돌봄노동자와 교사의 임금을 비교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교사와 돌봄노동자의 노동이 동일하다면 비교가 유의미하겠으나, 하는 업무가 다른데 교사와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혹시 교사의 업무가 돌봄이라는 의미로 넣으신거라면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는 진지하게 항의할 의향이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굳이 돌봄종사자의 임금 비교를 해야한다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의 임금 비교가 합당하다.

아동돌봄에 대한 책임이 돌봄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의미가 불명확하다. 아동 보호를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라면 십분 동의한다. 하지만 교사가 교육보다 돌봄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반대한다. 학교에서는 놀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발달단계상 구체적 조작용이 필요한 연령대인 1~2학년 학생에게는 놀이, 돌봄과 교육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학교의 모든 활동은 단순 돌봄, 보호보다는 반드시 학생의 학습과 발달을 우선시해야 한다. 저학년은 쉽고 놀이, 구체적 조작용이 필요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구조화된 활동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체육돌봄 제안

지역 조례로 문화예술체육시설당 문화돌봄터, 예술돌봄터, 체육돌봄터(이하 문예체돌봄터)를 1실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돌봄시설의 양 확대와 돌봄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때, 돌봄시설은 최대한 아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하고 돌봄시설까지 이동도 돌봄시설에서 책임져야 한다.

문화돌봄터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 관련 시설에 설치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특히 실물이 중요한데, 별도 돌봄 공간을 마련해 편안한 돌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과 친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문화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어린이 도서를 원하는 만큼 접할 수 있다. 예술돌봄터는 극장시설 등에 설치하며 지역 예술인을 활용한다. 악기를 배우는 등의 활동도 좋지만 극장에서 연습하는 예술인들의 모습을 견학하는 것도 충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극장은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무대장치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가까이 하는 기회 자체가 아동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체육돌봄터는 지역의 많은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 후 활용되지 않아 생기는 예산낭비 논란을 막을 수 있다. 체육시설에 돌봄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에 설치하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전문적인 시설을 학생들이 견학 혹은 체험할 수 있다. 다목적 체육관인 만큼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돌봄 참여 아동의 체력을 증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화예술체육돌봄 제안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앞서 언급했듯 아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예체 돌봄의 핵심이다. 현재 돌봄이 아동에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도 많은 돌봄종사자가 아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 환경이 단순히 온돌방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보호자가 맞벌이라서, 관심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평등하지 못하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런 시설들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학교는 정해진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있어 끝없이 체험학습만 할 수는 없다. 그 대안으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문화예술체육돌봄을 통한 아동의 문화, 예술, 체육 향유 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돌봄을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곳이라는 곳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직장의 노동, 복지가 열악할수록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돌봄을 차선/차악으로 선택하기에 어쩔수없다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자라는 환경은 과연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인지, 아동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호자가 없어도 아이들이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아동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도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맞벌이도 분명 돌봄수요 증가의 한 요인이겠으나, 여성의 사회 진출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권리가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돌봄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다. 노동자에게 주어진 노동자의 권리(연가, 연차, 조퇴, 심지어 육아휴직까지)을 회사에서 보호하고 있는가, 경력단절은 일어나지 않는가. 돌봄서비스 확대는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해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남성의 육아휴직 적극 장려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보호자를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 주어야만 아이들도 보호자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출생률의 증가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토론 0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등권리과

조 선 경 과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등권리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등권리과

조 선 경 과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등권리과

2021 아동 돌봄 원탁 토론회
아동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대전환을 위한 원탁토론

발 행 일 2021년 5월 28일
발 행 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 련 문 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무국
Tel. 1544-4196 **E-mail.** hjy@hjy.kr **url.** www.hjy.kr

